

1번 ③

폐쇄경제에서는 민간저축 + 정부저축 = 투자가 성립해야 한다.

$$\text{민간저축} + 150\text{조} - 200\text{조} = 250\text{조}$$

$$\therefore \text{민간저축} = 300\text{조}$$

2번 ①

	소득 증가	소득 감소
이자율 상승	정부지출 증가	통화량 감소
이자율 하락	통화량 증가	정부지출 감소

이자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조합되어야 한다.

가능한 조합은 (정부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정부지출 감소, 통화량 감소)인데

이중에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이다.

3번 ③

시장에서 균형은 P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된다.

$$1 + 2Q = 40 - Q \rightarrow Q = 13, P = 27$$

한편, 사회적으로 최적 균형은 S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된다.

$$4 + 2Q = 40 - Q \rightarrow Q = 12, P = 28$$

따라서 후생손실은 다음과 같다.

$$(13-12) \times (30-27) \div 2 = 1.5$$

4번 ②

최저가격 설정 전의 균형부터 구하면

$$100 - Q = Q \rightarrow Q = 50$$

보조금을 s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으로 수요곡선은 s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한다.

이 새로운 수요곡선이 Q=50, P=60을 지나도록 만들면 된다.

$$P = 100 - Q + s \rightarrow 60 = 100 - 50 + s$$

$$\therefore s = 10$$

1단위에 1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총 수량이 50이므로 보조금 총액은 50×10=500이다.

5번 ④

① 정부지출 증가는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 유입을 일으킨다.

②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③ 고정환율제도일 때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으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로 인한 순수출 변화까지 일으켜 효과가 크다.

④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고정환율제도일 때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삼원불가능성정리이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로 바꾸는 경우 오히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얻을 수 있다.

6번 ②

통화승수는 민간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① 은행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통화승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반대로 은행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증가한다.

②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은 예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는 통화승수를 감소시킨다.

③④ 민간의 현금 보유,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가 감소할수록 통화승수는 증가한다.

7번 ③

$$MC=20Q+4$$

완전경쟁시장에서  $P=MC$ 가 되도록 생산하므로  $20Q+4=64 \rightarrow Q=3$

생산자잉여는 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므로

$$(64-4) \times 3 \div 2 = 90$$

8번 ①

① 경제성장률이 저축률에 의존한다.

② 물질 자본만 반영한 솔로우 모형에 비해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③ 개별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수 있으나 자본의 외부경제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한계생산이 일정하다.

④ 외생적 기술진보로만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솔로우 모형을 극복하고자 한 모형이다.

9번 ③

이윤 극대화 조건 :  $MR_1=MR_2=MC$

$$12-4Q_1=8-4Q_2=2 \rightarrow Q_1=2.5, P_1=7, Q_2=1.5, P_2=5$$

① 판매량은 시장 1이 크다.

② 한계수입은 같다.

③ 맞는 선택지이다.

④ 탄력성이 다르며, 이 때문에 가격도 달라진다.

10번 ①

①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노년기에 저축률이 낮아진다.

② 단기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임시소득의 증가로 소비에 영향이 작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

③ 기초소비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

④ 소비성향이 과거의 최고 소득에도 의존한다.

11번 ③

화폐수량설 :  $MV=PY \rightarrow$  통화량 증가율 + 화폐유통속도 증가율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x + 2 = 3 + 4$$

$$\therefore x = 5$$

12번 ②

정책 이전 :  $16-P=2P-8 \rightarrow P=8, Q=8$

최고가격을 7로 설정하면 공급량이 6으로 감소하고, 그 결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therefore \text{후생손실} : (8-6) \times (10-7) \div 2 = 3$$

13번 ③

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일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필립스곡선 또한 그렇다.

② 주어진 식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상승한다.

③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아무 영향이 없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④ 예상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

14번 ②

①②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경우 소득의 0.4를 A에, 0.6을 B에 사용한다. 따라서 A는  $100 \div 20 = 5$ , B는  $150 \div 40 = 3.75$ 를 소비한다.

③ 같다.

④ 소비를 2배 증가시키면 효용도 2배 증가한다.

15번 ①

$$Max \pi = 500\sqrt{L} - L^2$$

$$f.o.c \frac{\partial \pi}{\partial L} = 250L^{-\frac{1}{2}} - 2L = 0 \rightarrow L = 25$$

이때 기업은 노동공급곡선의 높이만큼 임금을 지급한다.

$$\omega = 25$$

16번 ④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1 - \text{실업률})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 \text{고용률}$$

④ 실업률이 일정할 때 고용률이 상승했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어야 한다.

17번 ②

소비자에게 1개당 10의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10만큼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다.

$$\text{새로운 수요곡선} : P = 700 - Q - 10 = 690 - Q \rightarrow Q = 690 - P$$

이와 공급곡선의 교점을 구하면

$$690 - P = 200 + 4P \rightarrow P = 98$$

따라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8,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98 + 10 = 108$ 이다.

18번 ③

③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경우는 완전경쟁시장뿐이다.

①②④ 맞는 선택지이다.

19번 ④

① 고전학파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는 구축효과로 완전히 상쇄된다.

② 리카도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민간은 국공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소비에 영향이 없다.

③ 공급중시 경제학에 따르면 세율 인하가 조세수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케인즈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증수가 정액세증수보다 크다.

20번 ①

① 황금률 자본량보다 자본이 많은 경우 황금률로 이동하려면 저축률을 낮춰야 한다.

② 자본량이 감소하므로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③ 자본량이 감소하므로 1인당 소득도 감소한다.

④ 황금률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과 같다.